

사회복지 지방이양화

복지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

재정자립도 지자체장의 복지마인드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방향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지역별 보조금 지원의 격차로 인해 종사자의 처우에 심한 격차가 발생하고 지역별 종사자간의 위화감 및 처우가 좋은 지역으로 사회복지 인력의 편중 및 기피 지역발생이 우려된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알아보고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2003년 7월 정부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이 발표되고 2004년 1월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어 발표된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분야가 정부전체 지방이양대상 사업의 약 45%, 금액기준 약 62.2%로 주로 취약계층지원 등 복지분야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군구별 자치단체 예산확보 현황을 살펴보면 총 234개 자치단체 중 23개(9.8%) 자치단체들이 80% 미만의 저조한 예산확보율을 보였으며 100% 예산확보율을 보인 곳은 36곳(15.4%)에 불과하였다(2005년 6월 기준).

재정분권화가 사회복지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특히 서울의 재정자립도는 95%에 달하나 도의 기초자치단체는 20%대에 머물고 있어 지역별 격차가 존재할 뿐 아니라 이러한 지역별 격차가 지방간 복지 격차를 초래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이처럼 재정 분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부분의 변화를 몰고 가는 핵심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선(시·군·구)의 사회복지 권한과 책임이 확대되도록 한 지역복지 협의체 구성 등이 동시에 시행되었고 이러

한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은 사회복지현장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지자체들 간의 경쟁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재정분권화로 인한 긍정적 방향은 주민들과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욕구에 따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고 분권화된 지자체들 간의 경쟁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다양한 사회복지 시설과 서비스가 개발 될 수 있고 주민들의 선택 폭이 넓어 질 수 있다.

또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에 자율성을 신장시키며 지역현실에 맞는 복지계획 수립의 계기가 된다. 이외에도 지역주민들이 복지예산 수립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실례로 부천시의 경우 예산집행과정에 있어 전화 등을 통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함으로 긍정적 평가를 얻은 바 있다.

재정 자립도에 따른 편차 지자체장의 복지 마인드에 따라 서비스 방향도 차이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효율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일정한 수준 이하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재정 자립도가 높은 서울시와 같은 경우 사회복지 시설 및 서비스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지방의 많은 지자체들은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오히려 일정 수준의 사회복지 서비스와 시설이 후퇴 될 수 있으며 지자체장의 복지 마인드에 의해 정책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

뿐만아니라 복지시설 운영비 지방이양에 따라 지방비 부담 증가를 우려하여 신규시설 설치 및 사회복지법인 허가, 시설 인력증원 등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재정 자립도 외 자치단체장의 복지 마인드 역시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고경화 국회의원은 "현재는 복지재정이 아동복지, 청소년 등으로 구분되어 내려오고 있지만 앞으로 이러한 구분 없이 하나의 덩어리로 내려오게 되면 그야말로 지자체장의 마인드에 따라 복지 발전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불안한 상황으로

“ 사회복지서비스 축소로 인한 지역사회복지 낙후, 사회복지서비스 질적·양적 축소 등을 토대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낸다면 아무리 지자체장의 마인드와 의식이 사회복지와는 전혀 다를 지라도 사회복지사업에 손을 대지 못할 것이다. ”

빠질 수도 있다. 그 이전까지 재평가를 해서 정말 지자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든지, 무리가 있어도 개선이 가능한지, 중앙에서 다시 총괄해야 할지 등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서초구의 경우 구청장이 관심있게 추진한 실무자협의체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 소속으로 관련 기관 실무자 뿐 아니라 대표자모임을 통해 수렴된 의견이 구정방향에 반영되고 있다.

이길준 까리따스방배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팀장은 “해당분과 관련 구청 공무원 뿐 아니라 지역 내 관련 기관 실무자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함으로 하나의 영역에 치우치거나 탁상공론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실질적 지원이나 논의가 되고 있다”며 “특히 재가분과에서는 서민긴급지원대책위원회 구성, 회의를 통해 지역 내 저소득계층에 긴급지원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회성 사업으로 저소득 독거어르신 철순·팔순잔치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긍정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또 이길준 팀장은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현장실무자들의 의견이 실제 구정방향에 반영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 틀림없지만 구청장의 마인드, 지역여건에 따라 차별화된다고 말했다.

종사자 처우개선 편차 수당 확대되기도, 복지부 권장지침 못 미치기도

최근 서울시 A 구에서 구내 사회복지기관

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한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바 있다.

반면 경북 A시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보건복지부 종사자 보수 권장지침은 전년 대비 5% 상승이지만 이 시의 경우 2.5%만 증가 되도록 변경되었다.

향후 전국적 기준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이 지자체별 인건비 등 처우개선의 차이가 발생되고 이에 따른 복지인력의 지자체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

이외에도 운영비 부족으로 종사자 배치인력을 줄이고 보수수준을 동결하거나 하향조정하는 경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처럼 지역별 보조금 지원의 격차로 인해 종사자의 처우에 심한 격차가 발생하고 지역별 종사자간 위화감 및 처우가 좋은 지역으로 사회복지 인력의 편중 및 기피지역 발생이 우려된다.

이러한 사회양극화는 많은 사회적 과장을 일을 낄 것이다. 우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부족이나 지자체의 복지격차가 그 것이며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늘어나는 복지욕구에 대해 국가책임에 의해 그 욕구의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민의 복지욕구가 미충족되는 상황으로 재정분권이 작용한다는 것이 또 그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재정집중 대상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와 욕구가 빠르게 증가

지역별 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의 균형적

구축 및 사회복지 수준 형평성을 위해서는 재정분권 내용에 대한 재검토 및 조정이 필요하다.

A 사회복지사는 “현재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나 가족기능 약화는 여러 통계지표로 확인되고 있는 바이며 이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와 욕구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욕구의 증가가 예상됨에도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수준은 열악하다”고 평가하고 “재정책임을 지방에 주는 것은 지방정부의 실행여건이 확보된 뒤 행해져야 하며 지방정부가 재정자립도가 낮고 복지정책에 대한 실행의지가 미약하며 더구나 복지인프라 구축이 미약한 상태에서 지방정부에 재정책임과 공급책임을 모두 이양하는 것은 역행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고려한다면 사회복지서비스는 재정분권이 아닌 재정집중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계, 사회복지사의 노력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공감 필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 내는 것 역시 중요하다.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지난 2002년부터 집회와 결의대회 등을 통해 사회복지의 제도적 문제와 정책개선을 위한 대정부 투쟁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이 사회복지사들의 밥그릇 싸움이나 권리만을 위

한 활동이 아닌 사회복지의 제도적 문제와 정책개선을 바로잡기 위한 활동임을 국민적 공감을 통해 얻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 스크린쿼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영화인들의 밥그릇 싸움이 아닌 우리나라 문화를 지킨다는 의미의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짐으로 영화인들의 1인시위와 투쟁적인 모습들이 문화를 지키는 활동으로 보여지고 동참하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서비스 축소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문제를 단순히 우리들 안에서 해결하려하기보다는 사회복지서비스 축소로 인한 지역사회복지 낙후, 사회복지서비스 질적·양적 축소 등을 토대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낸다면 아무리 지자체장의 마인드와 의식이 사회복지와는 전혀 다를 지라도 사회복지사업에 손을 대지 못할 것이다.

사회복지계, 사회복지사의 대처도 수반되어야

이와 함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사회복지계, 사회복지사의 노력이다.


한승호 양천노인종합사회복지관 복지1과장은 "이러한 사회 변화에 대해 사회복지사들이 전문성 향상과 함께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힘을 키워야 할 것이다.

대표적 전문가 집단인 의사나 변호사들뿐 아니라 간호사, 교사 등도 협회 또는 단체를 통해 사회적 영향력과 의사를 표현하고 사회는 그들의 행동과 의사표현을 주목하고 있는 것에 비해 사회복지사 조직은 아직 결집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미흡하다고 생각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협회 및 단체들이 강한 결집력과 세력을 확보해야하며 지역주민 및 지역사회 여러 단체들과 긴밀한 유대관계와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관련 단체

들의 영향력 발휘를 제안했다.

또 한승호 과장은 각 분야에서 자신들의 역할 인식과 서로간의 전문성 및 입장 존중이 전제될 때 지속적 협력과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여러 영역에 대해 지방이양이 더 효율적인 부

분과 지방의 재정자립도 및 현실을 감안 할 때 국가의 개입과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심도 있게 이루어질 것이며 그에 따른 정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질 때 우리나라 사회복지 서비스의 균형적인 발전과 국민 전체를 위한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i Interview

서초구 지역복지협의체 실무분과

앞서 소개한 서초구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에서 활동하는 이길준 까리따스방배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팀장을 통해 실무협의체 활동에 대해 들어본다.

1. 서초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무자협의체의 활동시기 및 동기는 무엇입니까

활동은 그 이전부터 었지만 2005년 1월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그 당시 구청장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 계획을 밝혀 분과 구성 등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2. 실무협의체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현재 9개 분과가 있으며 청소년·노인·장애인·자원봉사·영유아동·재가복지·통합서비스·노동고용·여성분과로 나뉜다. 각 분과에는 지역 내 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하며 기관별로 최소 1명이 참석하게 된다. 여기에는 구청의 관련부서 담당자도 함께 참석하게 된다.

3. 실무자협의체의 의견이 서초구청 방향에 반영되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실무분과모임을 통해 모아진 의견이 필요와 내용에 따라 실무협의체 대표자모임에서 논의되고, 이후 구청 방향으로의 반영이 요구되는 내용이 구청장에게까지 전달된다.

4. 현재까지 실제로 반영되었던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실무협의체에서 모아진 전체 의견이 구청 방향으로 반영된 사례는 아직 없으나 재가복지분과의 경우 소규모로 반영된 사례가 있다. 실무협의체 대표자 모임에서 구성된 서민긴급지원대책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하여 지역 저소득 가정에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재가복지담당자를 통해 자원을 연결하고 현재 1회성 사업으로 저소득 독거어르신 칠순·팔순 잔치 등을 진행한 바 있다.

5. 지자체 내에서 실무자협의체를 구성, 사회복지참여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현장실무자 중심의 실무자협의체 구성은 지역 네트워크 구성은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온 의견이 구청방향에 반영되려면 실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구청장에게 바로 전달되어 구청방향으로 반영되는 방법보다는 구의회 등 의견으로 상정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